

사교육목적과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사교육비지출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ccording to Purposes of Private Education and After School Program Participation

이준호(Joonho Lee)¹, 황혜선(Hyesun Hwang)^{2*}

¹The E.Land Group SPAO, ²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household's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that aggravates a burden on households by using the data from the 2014 Private Education Survey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The effects of purposes of private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an after school program that is pushed by the government on household's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purposes of private education lean toward preparing to enroll in school and relieving parents' uneasiness rather than prior learning. Second,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private education, the differences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were verified. Households spend the highest level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to enroll in school contrary to the lowest level, which was for the purpose of compensatory learning. Third, participation in an after school program that is regarded as a method of moderating households' private education burden, had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Fourth,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was influenced by the purposes of private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an after school program. In 2014, the Korean government enforced a law that prohibits schools' education in advance (prior learning) and regulates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advertisement about prior learning. Regarding this regulat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urposes and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to provide an empirical reference to determine the improvement of related policies.

▲주제어(Key words): 사교육비(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사교육목적(purposes of private education), 사교육비경감 정책(policy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방과후학교(after school program), 선행학습(prior learning)

I. 서론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015년 기준 국가 예산의 8.8% 규모에 이른다(C. Woo, 2015). 이는 학벌위주 사회에서 자녀의 지위상승을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관념이 팽배하고 가계의 중요한 목표로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S. Lee, 2005). 그러나 사교육의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나 교육격차의 심화와 같은 교육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정경제 및 복지 문제, 국가경제 문제, 계층간 및 지역간 격차와 갈등 문제, 저출산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 Corresponding author : Hyesun Hwang,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28644, Korea, tel: +82-43-261-2747, E-mail: hsun@cbnu.ac.kr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분석과 시사점(M. Park, J. Choi, & J. Park,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 93만 8133원에서 2013년 420만 3326원으로 약 4.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교육비는 5.9배 증가하여 교육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계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 실태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분석한 결과(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4)에 따르면 2003년 가계 가처분소득의 8%에서 2013년 10% 수준에 이르는 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40대 가구 기준 2.1%인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교육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의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축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소비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정경제와 복지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S. Lee, 2006;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한편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공교육에 의해 교육의 수요가 모두 충족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공교육 기능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공교육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한 채 사교육에 의존한 교육체계가 고착될 경우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교육기회와 질의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J. Park, 2006).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사교육은 수능이나 내신성적을 위한 사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의 입학전형에 맞추어 컨설팅을 받는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EBS, 2015). 우리나라의 과열된 사교육의 실태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학생의 경우 특목고 진학계획이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H. Park & J. Lee, 2009), 심지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를 시작하고 그로 인한 사교육비 과열 투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K. Lee, 2012). 최근 특목고의 입학전형 변화로 인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학계획을 세우고 맞춤형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사교육의 수준 또한 강화되고 있다(K. Lee, 201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1980년대에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외가 금

지되었고, 이후 1997년에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위성교육 방송 등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후에도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EBS 수능강의를 도입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등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진형 대입 전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학교 자율화 및 특성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 시장의 관리 등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Y. Kim, S. Yang, & S. Park, 2012). 이와 함께 2014년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동법은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의 규제내용의 핵심인 선행학습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반면 학원의 경우 선행교육 광고를 금지시키는 수준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루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H. Chung, 2015). 이러한 비판에 따라 최근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대입 수능을 준비해야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예습이 불가능한 학교 수업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이나 심화학습으로 수업편성을 한 채 선행학습을 하는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기 위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K. Chung, 2016).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법적 규제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기적 양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선행학습을 당연시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과열된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후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통계청의 ‘2014년 사교육비 조사(Statistics

Korea, 2014)’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부모(학생)가 사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주된 목적과 사교육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정책의 참여정도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가계와 학생(자녀)의 특성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가계의 특성이나 자녀의 특성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여력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가계와 자녀의 특성만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가계의 높은 교육비 지출비중은 가계의 다른 소비와 저축을 줄여가면서 과열된 사교육시장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우리나라의 실태(S. Lee, 2005)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과열된 사교육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어떠한 동기로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4년은 과열된 사교육시장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선행학습이 학교에서 전면 금지되었고 사설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사교육 선택 동기와 사교육비 지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의 가계특성 및 자녀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교육선택 목적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참여정도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사교육비 지출과 가계부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다. I. Kim and J. Yeo(1996)의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에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거주지역, 자녀의 학년, 자녀수, 기대교육수준의 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사교육비를 학습교육비와 재능교육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학습교육비의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습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강남에 거주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 Park and J. Yeo(2000)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과 개인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가계특성 및 자녀의 특성,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높은 가계소득,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 서울 지역 거주 순으로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 Na and J. Yoon(2011)의 연구에서는 서울과 인천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여 고등학교 2학년(인문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 여부 및 지출규모에는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열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자녀의 사회적 지위와 고용안정성 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S. Lee(2002)은 소득이 낮은 하층에서의 사교육 참여가 현저히 낮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을 크게 늘려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감소하였음을 제시하였다. S. Lee의 또 다른 연구(2005)에서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가장 적은 1분위부터 5분위까지를 구분하여 사교육비지출과 다른 소비지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위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전체 소비지출 중 1% 미만에서부터 18%에 이르는 수준까지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에 따라 다른 소비의 지출을 조절하는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가 크지 않을 때와 점차 커질 때 소비지출의 조정 전략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생활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S. Lee(2003)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계와 중산층가계, 고소득층 가계를 구분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순자산규모가 많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에서는 가계수지가 흑자일수록, 순자산규모가 많을수록, 연간 총소득 대비 부채의 비중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주택 외 부채 상환금이 낮을수록, 연간 총소득 대비 저축과 투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에 대해 설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 Park and J. Yeo(2000)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험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교육비 지출과 소비지출 비목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 Lee(2005)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소폭 증가할 경우 필수적 지출의 배분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이를 통해 다른 소비지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생활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H. Baek and S. Ahn(2012)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의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임을 제시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가계는 사교육비의 비중이 변화할 때 소비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반면, 빈곤층의 경우 조정이 가능한 소비항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가 느끼는 부담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I. Kim and J. Yeo(1996)의 연구에서 학습교육비가 높을수록 가계의 주관적 압박도가 높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관적 압박도가 낮게 나타난 재능교육비는 학습교육비에 비해 선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J. Park(2006)의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66%가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소득대비 11.8%, 생활비대비 13.1%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여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쳤을 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의 형평성을 위해 공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수용과정에서 화두가 된 선행학습의 목적을 가지는 사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교육비 지출에 포함하는 항목을 학습과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 조사의 일반교과의 사교육비 지출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방면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Ministry of Education, 2014)'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대응,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법·제도 인프라 구축,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의 네 가지 핵심전략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전략은 역대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큰 방향성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의 질 제고

사교육의 억제 및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에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Ministry of Education, 2014)'에서는 사교육 수요가 집중된 영어와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확대, 학습량의 조정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교육비의 65%를 영어와 수학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두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량을 줄이는 한편 교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영어동아리 활동 지원, 수학클리닉 확대, 맞춤형 보정 학습자료 확대, 현장교사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과연구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별 맞춤대응을 통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능력을 고려하고 자기주도학습의 전반적 매뉴얼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수립되었다.

2) 사교육 억제 정책

사교육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는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을 중심으로 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2014년 2월에 발표된 ‘사교육비·의식 조사(Ministry of Education, 2014)’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의 총 규모(18.6조원)와 참여율(68.8%)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1인당 사교육비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업체의 불안마케팅, 물가상승률, 학원비 인상, 선행교육 풍토가 사교육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학원법 준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한 제재 사항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H. Kim, 2014). 또한 학원비 인상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학원비의 공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종전의 학원중점관리지역을 사교육특별관리지역으로 개편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학원비 단속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3) 공교육으로의 대체 유도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이 전개된다. 특히 초등의 경우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육을 담당할 곳이 없어 사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나타나, 공교육에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이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관련 부처와의 연계, 돌봄교실의 확대, 초등돌봄교실 안전 길라잡이 배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EBS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함께 수립되었는데,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어와 수학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었다. 영어의 경우 EBS를 활용하여 정규교육과정에 입각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확충하고 방과후 영어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의 단계별, 수준별 개발 전략을 추진한다. 수학은 EBSmath를 활용하여 수학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고 EBS 수능연계 교재의 교재수와 문항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방과후학교가 있다.

동 대책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및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의 평가지표에 포함된 방과후학교 참여율 외에도 만족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학생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 정보공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정책방향 중에서도 공교육이 사교육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사교육 서비스 소비자의 정부 정책 참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연구문제 1.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일반교과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계의 사교육목적이 어떠한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일반교과 사교육목적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있는지 전체 및 학교급별 가계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연구문제 3. 가계특성(부모연령, 부모교육수준, 거주지역, 맞벌이여부, 가계소득)과 교육특성(학교급, 학교성적, 사교육목적), 방과후학교 참여시간에 따라 일반교과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도 사교육비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되었다. 조사는 매년 연간 2회 이루어지며 2014년도 조사기간은 1차 조사(3, 4, 5월분 사교육비를 조사: 2014. 5. 28~ 6. 18), 2차 조사(7, 8, 9월분 사교육비를 조사: 2014. 9. 24~10. 15)로 실시되었다. 표본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4개 학교급별, 17개 시도별로 층화 후 학년별로 학교를 독립적으로 추출하였다. 본 자료는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되었으며 조사방법은 혼합조사(인터넷조사를 기본으로 지면조사

Table 1. Measurement of Variables

Variables	Measurement
Residence	Seoul, metropolis, small city, rural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Purpose of private education	preparing to enroll school, relieving parents' uneasiness, prior learning, remedial purpose
School record	high(10%), mid-high(11~30%), mid(31~60%), mid-low(61~80%), low(81~100%)
Parents' age	30's and under, 40's, 50's and over
Parent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Family income source	father only, mother only, double income, none
Monthly family income	under 200, 200~399, 400 and over
After school program	total time of taking after school program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monthly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unit: KRW)

Table 2. Description of sample (N=43,287)

Frequency(%)

Groups	School			Total1)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Residence	Seoul	1431 (11.3)	2052 (14.5)	2579 (15.6)	6062 (14.0)	
	Metropolis	4327 (34.1)	4637 (32.9)	5309 (32.2)	14273 (33.0)	
	Small city	4869 (38.3)	5585 (39.6)	6643 (40.3)	17097 (39.5)	
	Rural	2071 (16.3)	1833 (13.0)	1951 (11.8)	5855 (13.5)	
	Total	12698 (100.0)	14107 (100.0)	16482 (100.0)	43287 (100.0)	
Parents' age	Father	≤ 30's	3425 (27.4)	554 (4.0)	119 (0.7)	4098 (9.7)
		40's	8506 (68.1)	11109 (81.0)	11129 (69.7)	30744 (72.9)
		50's≤	554 (4.4)	2046 (14.9)	4727 (29.6)	7327 (17.4)
		Total	12485 (100.0)	13709 (100.0)	15975 (100.0)	42169 (100.0)
	Mother	≤ 30's	6587 (52.7)	2331 (16.8)	705 (4.3)	9623 (22.6)
		40's	5780 (46.3)	10834 (78.3)	13886 (85.4)	30500 (71.6)
		50's≤	125 (1.0)	677 (4.9)	1674 (10.3)	2476 (5.8)
		Total	12492 (100.0)	13842 (100.0)	16255 (100.0)	42599 (100.0)
Parents' education	Father	≤ Middle school	139 (1.11)	257 (1.9)	334 (2.1)	730 (1.7)
		High school	4014 (32.2)	4529 (33.0)	5141 (32.2)	13684 (32.5)
		College/university	6892 (55.2)	7493 (54.7)	8608 (53.9)	22993 (54.5)
		Graduate school	1440 (11.5)	1430 (10.4)	1892 (11.8)	4762 (11.3)
		Total	12485 (100.0)	13709 (100.0)	15975 (100.0)	42169 (100.0)
	Mother	≤ Middle school	134 (1.1)	243 (1.8)	301 (1.9)	678 (1.6)
		High school	4621 (37.0)	5916 (42.7)	7334 (45.1)	17871 (42.0)
		College/university	7016 (56.2)	7023 (50.7)	7716 (47.4)	21755 (51.1)
Total	12492 (100.0)	13842 (100.0)	16265 (100.0)	42599 (100.0)		
Family income source	Father only	5653 (44.5)	5107 (36.2)	5547 (33.7)	16307 (37.7)	
	Mother only	567 (4.5)	1015 (7.2)	1216 (7.4)	2798 (6.5)	
	Dual income	6396 (50.4)	7800 (55.3)	9577 (58.1)	23773 (54.9)	
	None	76 (0.6)	173 (1.2)	124 (0.8)	373 (0.9)	
	Total	12692 (100.0)	14095 (99.9)	16464 (99.9)	43251 (99.9)	
Monthly family income	<100	186 (1.5)	213 (1.5)	213 (1.3)	612 (1.4)	
	100-199	789 (6.2)	1000 (7.1)	1151 (7.0)	2940 (6.8)	
	200-299	2092 (16.5)	2004 (14.2)	2346 (14.2)	6442 (14.9)	
	300-399	2824 (22.2)	2941 (20.8)	3298 (20.0)	9063 (20.9)	
	400-499	2405 (18.9)	2762 (19.6)	3059 (18.6)	8226 (19.0)	
	500-599	1735 (13.7)	2024 (14.3)	2421 (14.7)	6180 (14.3)	
	600-699	937 (7.4)	1075 (7.6)	1251 (7.6)	3263 (7.5)	
	700≤	1730 (13.6)	2088 (14.8)	2743 (16.6)	6561 (15.2)	
Total	12698 (100.0)	14107 (100.0)	16482 (100.0)	43287 (100.0)		

1) Differences in total frequency due to the number of single-parent families

Table 3. Purposes of Private Education

Purpose	Frequency(%)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Preparing to enroll school	1849 (15.1)	4682 (33.5)	10686 (65.1)	17217 (40.4)
Relieving parents' uneasiness	3294 (26.9)	2967 (21.3)	1531 (9.3)	7792 (18.3)
Prior learning	4470 (36.5)	4020 (28.8)	2671 (16.3)	11161 (26.2)
Remedial purpose	2632 (21.5)	2287 (16.4)	1526 (9.3)	6445 (15.1)
Total	12245 (100.0)	13956 (100.0)	16414 (100.0)	42615 (100.0)

를 보충적으로 실시)와 배포조사(표본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편으로 조사표를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조사표 작성)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78,830 가계 중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자녀의 사교육 경험이 있는 43,287 가계에 대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구분, 학교급 구분, 일반교과 사교육 목적, 자녀 성적구분,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월평균 가구소득, 방과 후 학교 참여여부, 방과 후 학교 참여시간,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특성과 학부모의 사교육 목적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 통계분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 목적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금액을 살펴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표본가계의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층화표집의 결과에 따라 서울이 14.0%, 광역시 33.0%, 중소도시 39.5%, 읍면지역 13.5%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은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부의 연령의 경우 세 학교급 모두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모의 연령은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30대 이하(52.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40대가 78.3%, 8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세 학교급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는 전체 가계 기준으로 54.9%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학교급 모두 맞벌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부의 경제활동만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00만원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2014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된 중위소득(1,966,646원)과 월평균소득(4,287,024원)을 참고하여 200만원 미만의 가구와 200~400만원 미만의 가구, 400만원~600만원 미만의 가구, 600만원 이상의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2%, 200~400만원 미만이 35.8%, 400~600만원 미만이 33.3%, 600만원 이상이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학교급별 사교육목적

본 자료를 통해 사교육을 하는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교과의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표본의 1순위 사교육 목적을 4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사교육목적은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보충의 목적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보육의 목적, 기타목적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게만 한정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보육목적은 제외하였으며, 기타목적 역시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4가지 목적의 응답결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사교육목적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준비가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선행학습이 26.2%, 불안심리 18.3%, 학교수업보충이 15.1%로 나타났다.

사교육목적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안심리가 2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진학준비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 목적은 선행학습(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준비가 65.1%, 선행학습이 16.3%로 나타났다.

Table 4.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private education (Unit: 10,000 KRW)

Purpos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M	SD	M	SD	M	SD	M	SD
Preparing to enroll school	392.78 c	239.73	523.62 c	273.16	595.46 c	386.95	554.16 c	351.42
Relieving parents' uneasiness	282.30 b	176.24	443.46 b	217.27	485.50 b	283.86	383.59 b	233.81
Prior learning	282.72 b	187.19	444.73 b	216.76	492.51 b	281.66	391.28 b	241.11
Remedial purpose	242.66 a	161.61	387.69 a	222.01	426.87 a	264.17	337.74 a	226.10
F	243.213**		191.850**		161.549**		1370.385**	

a, b, c: scheffé test

*** $p < .001$

Table 5.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ccording to after school program participation (unit: 10,000 KRW)

After school program particip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M	SD	M	SD	M	SD
N	315.78	191.07	489.54	250.31	704.05	467.21
Y	268.62	192.66	426.55	230.42	527.03	329.73
t	13.688**		15.557**		17.585**	

a, b, c: scheffé test

*** $p <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선행학습이 가장 중요한 사교육목적으로 꼽히고 있는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준비에 사교육목적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교육목적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목적에 따른 연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전체 가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진학준비를 위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연간 554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이 연간 391만원, 불안심리가 연간 3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출을 보였다. 학교수업보충의 목적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연간 337만원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급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진학준비가 가장 많은 지출을 보였으며 선행학습과 불안심리에서 두 번째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록 선행학습을 특별법으로 규제 하고 사교육의존을 낮추려는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선행학습을 위한 사 교육에 여전히 가장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점은 사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을 불안심리라고 응답한 경우, 학교수업보충 목 적과 같이 실질적으로 학습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출 되는 사교육비에 비해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교육시장이 맹목적인 편승이 나 동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별개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의 하나인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교급 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학교급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여부 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먼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연간 평균 약 316만원을 지출 하는 반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평균 약 269 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확률 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참여하는 경우 연간 427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연 간 약 63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1		Model 2		Model 3		VIF
		B	β	B	β	B	β	
Household								
Parents' age ¹⁾	F 40's	57.234	.086***	16.535	.025***	15.902	.024***	2.643
	50's≤	106.519	.133***	29.952	.037***	29.267	.036***	2.927
	M 40's	102.198	.155***	12.009	.018**	11.625	.018**	1.729
	50's≤	114.219	.088***	9.954	.008	9.305	.007	1.662
Parents' education ²⁾	F College/university	29.430	.049***	29.662	.049***	29.110	.048***	1.626
	Graduate school	60.705	.063***	62.337	.065***	62.992	.065***	1.635
	M College/university	17.592	.029***	29.266	.049***	30.386	.050***	1.519
	Graduate school	41.518	.031***	58.366	.043***	61.207	.046***	1.338
Residence ³⁾	Metropolis	-151.434	-.237***	-141.578	-.221***	-122.062	-.191***	2.467
	Small city	-166.415	-.270***	-159.877	-.260***	-147.210	-.239***	2.466
	Rural	-219.629	-.250***	-203.538	-.231***	-185.617	-.211***	1.879
Family income source ⁴⁾	Dual income	-22.203	-.037***	-25.280	-.042***	-24.245	-.040***	1.053
Monthly family income ⁵⁾ (10,000 KRW)	200-400	44.417	.071***	49.773	.079***	48.792	.078***	3.591
	400-600	111.255	.174***	111.784	.175***	109.592	.172***	3.743
	600≤	204.709	.285***	198.645	.276***	196.009	.273***	3.384
Education								
School ⁶⁾	Elementary school			-203.068	-.307***	-237.867	-.360***	2.371
	Middle school			-61.758	-.096***	-99.562	-.155***	1.959
School record ⁷⁾	Mid-high (11-30%)			-5.294	-.008	-6.000	-.009	2.182
	Middle (31-60%)			-9.345	-.014*	-10.537	-.016**	2.402
	Mid-low (61-80%)			-23.421	-.030***	-25.193	-.032***	2.020
	Low (81-100%)			-46.436	-.052***	-48.544	-.054***	1.816
Purpose of private education ⁸⁾	Preparing to enroll			111.541	.181***	109.752	.178***	2.360
	Relieving uneasiness			57.188	.073***	56.562	.072***	1.725
	Prior learning			51.150	.074***	50.954	.074***	1.923
Private Education Policy								
After school program participation time						-7.025	-.100***	1.577
Model	F	720.322***		756.990***		749.232***		
	ΔF			654.839***		396.818***		
	R ² (Adj. R ²)	.200 (.200)		.296 (.295)		.302 (.302)		
	Durbin-Watson			1.900				

Reference group: 1) ≤30's, 2) ≤High school, 3) Seoul, 4) Single income, 5) <200, 6) High school 7) High(10%), 8) Remedial purpose

* p < .05, ** p < .01, *** p < .001

의 경우 가장 큰 금액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연간 704만원의 지출을 보여 참여하는 경우에 비해 약 177만원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교육비 지출 영향요인 분석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되어 온 가계특성을 통제한 뒤 학생성적 및 사교육목적 을 포함한 교육특성 변인과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과 관

련된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교과 사교육비 지출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가계특성으로는 선행연구결과 (S. Lee, 2002; S. Lee, 2003; M. Park & J. Yeo, 2000)를 참고하여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거주지역, 부모의 경제활동여부,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또한 앞서 사교육목적 이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학교급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계특성만으로 설명한 Model 1의 설명력은 20.0%였으며 교육관련 특성 변인인 학교급, 학생 성적 및 사교육목적이 투입된 Model 2의 설명력이 29.6%로 유의확률 0.1%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의 참여시간의 변인이 투입된 최종 Model 3의 설명력은 30.2%로 Model 2에 비해 유의확률 0.1% 수준에서 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나타난 가계특성, 교육관련 특성, 사교육 경감정책 참여(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시간) 변인 중 가계특성에서는 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특성 변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I. Kim & J. Yeo, 1996; S. Lee, 2003; Y. Na & J. Yoon, 2011; M. Park & J. Yeo, 2000)에서 제시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행연구와 달리 맞벌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수준을 고정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위소득 이상과 이하의 집단을 구분하여 맞벌이 가계와 비맞벌이 가계의 사교육비 수준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위소득 이상의 집단에서는 맞벌이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이 연간 약 495만원인데 비해 비맞벌이 가계는 연간 541만원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t=-10.523$, $p<.001$). 반면, 중위소득 이하 집단에서는 맞벌이 가계가 연간 366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비맞벌이 가계는 연간 34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223$, $p<.001$).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맞벌이가 선택적일 수 있는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맞벌이가 가계경제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관련 특성변인 중에서는 성적이 상위인 경우에 비해 중위 이하의 성적 수준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목적은 진학준비목적인 경우($\beta=.178$, $p<.001$), 불안심리의 해소가 목적인 경우($\beta=.072$, $p<.001$), 선행학습의 목적인 경우($\beta=.074$, $p<.001$) 모두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학교급과 가계소득, 거주지, 사교육목적이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beta=-.360$, $p<.001$)와 중학교($\beta=-.155$, $p<.001$) 모두 사교

육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집단에 비해 나머지 집단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월평균 600만원 이상의 가계소득을 가진 집단($\beta=.273$, $p<.001$)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서울에 비해 광역시($\beta=-.191$, $p<.001$), 중소도시($\beta=-.239$, $p<.001$), 읍면지역($\beta=-.211$, $p<.001$)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교육목적이 진학준비인 경우 학교수업을 보충하려는 목적에 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다($\beta=.178$, $p<.001$). 사교육 경감정책인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시간은 사교육비 지출에 부적 영향($\beta=-.10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을 살펴본 결과 진학준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선행학습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심리로 인한 사교육 역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교육목적은 선행학습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대비해 볼 때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은 감소하였으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진학준비의 사교육목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변화된 교육제도에 어느 정도 순응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자녀의 교육을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서는 사교육 목적이 선행학습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이 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학원 등에서는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행위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교육에서 받을 수 없는 선행학습교육을 받기위해 사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불안심리로 인해 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응답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과는 상당히 차이

가 있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를 보여준다. 최근 서울의 한 학원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설명회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3.5%에서 2015년 33.4%로 늘어났을 만큼 상급학교 진학준비를 위한 교육열이 높아지고 시기가 매우 앞당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E. Lee et al., 2015). 한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서는 진학준비의 목적에 치중하여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 국제중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과 같이 상급학교로의 진학 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 입학전형이 다양해지면서 각 전형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든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컨설팅해주는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E. Lee et al., 2015).

둘째, 사교육목적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학준비 목적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크고 선행학습과 불안심리가 그 다음으로 많고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지출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가계의 사교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는 달리 실제 교육의 수요자가 주된 사교육 목적으로 꼽고 있는 것이 상급학교 진학과 선행학습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에서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교육에서 주로 담당하는 예습의 기능을 학교가 전혀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더욱 끌어올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교육비 지출은 정부에서 사교육경감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참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학교급 모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더 적었으며 지출의 차이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과후학교가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모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특별법으로 인해 방과후학교가 담당해오던 사교육 대체효과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후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전략에 대한 연구(S. Lee, 2006)에 따르면 사교육

비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충당되며, 고소득층과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계의 경우 현재의 소비뿐만 아니라 저축을 함께 감소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가계의 현재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생활에도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의 경감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때 사교육의 수요자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배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은 진학준비나 선행학습과 같이 대부분 다음 과정에 대한 대비 또는 예습과 관련되므로 이러한 사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현재의 법 추진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해소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가계의 부담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넷째,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특성, 교육관련 특성과 사교육 경감 정책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의 참여시간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계특성 변인 중에서는 모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관련 특성변인 중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교육관련 특성변인과 방과후학교 참여정도는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목적에 따라서는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 비해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교육비 지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진학준비와 선행학습이 꼽혔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수요가 공교육체계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더욱이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의 기능이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법이 정착되기까지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이후의 사교육비부담과 방과후학교를 통한 사교육 대체효과 등의 추이를 살펴봄

으로써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교육목적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불안심리에 의한 사교육비 지출이 두 번째로 크다는 점에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비합리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시장 규모는 연간 32조 9천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과열된 실태를 보이고 있다(C. Woo, 2015). 이러한 사교육시장의 과열양상이 교육시스템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져 실버푸어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사교육시장이 본질적인 사교육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녀가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해 사교육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이는 다시 과열된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안심리가 가장 큰 사교육의 목적이라고 제시하는 가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에 의한 사교육 지출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선택함에 있어서 비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 소비자의 의식 함양이 요구된다. 교육서비스의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며 과열된 사교육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것이 가계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교육경감 정책을 통해 실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특히 현행 특별법에 의해 금지된 선행학습은 현재 학부모들의 사교육 목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현재 사교육 수요자의 니즈가 선행학습,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 체계 내에서는 예습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사교육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계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선행학습과 같은 행위 자체의 규제뿐만 아니라 선행학습, 진학준비가 사교육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현재 교육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교육 체계

의 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각 학교급에 따라 사교육의 주된 목적이 다를 수 있으며, 가계의 특성,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사교육 지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선행학습이 주된 사교육목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안심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또는 그 이전에 영어와 수학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비중이 각각 약 23%,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학습 시작시기가 빠를수록 부모의 선택에 의해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이는 부모의 불안심리와 경쟁의식이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저학년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모의 의식개선이 필수적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준비가 주된 사교육목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목적 중등학교로의 진학이 대학입시에 유리하다고 인식되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국제중학교 입시준비, 중학교 단계에서는 특수목적고 입시준비를 통해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이 준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각 학교의 학생선발전형의 보완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사교육 부담완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학교의 학생선발전형의 적절성 검토와 함께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 이를 학교평가의 지표로 반영하는 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교육은 공교육 내에서의 교육수요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 외부로 이탈된 교육수요임을 감안할 때 공교육의 체계를 견실히 확립해나가는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공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체계 확립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니즈가 공교육으로 충족될 수 있다면 공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4년 사교육비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 실시목적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의 참여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실시 목적이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소

득이나 지역, 가구주의 연령 등과 같은 객관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심리적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사교육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나 심리적 변인 등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요인을 규명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 실시된 공교육정상화법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규제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Baek, H. Y., & Ahn, S. Y. (2012).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n the change of consumption structure of households depending on income bracket. *Korean Social Policy Review*, 19(3), 9-47.
- Chung, H. J. (2015). Prohibition of prior learning for a year... Has 'student life' been getting better? SBS News, 2015.8.19. Retrieved from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25 157.
- Chung, K. H. (2016). While National Assembly stop its work of approval of a revision... Teachers become law-breakers. Chosun, 2016.1.6. Retrieved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6/2016010600431.html
- EBS (2015). Resume tutoring costs 5 million won. expensive private education advisory. EBS. 2015. 7.14.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4). *KDI Economic Outlook 2014-1st Half*. Sejong,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im, Y., Yang, S., & Park, S. (2012). An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transitions and trends: Analysis of the "Household Survey" data.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9(1), 261-284.
- Kim I. S., & Yeo, J. S. (1996).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of household and the related Facto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37-149.
- Kim, H. W. (2014). 'Policy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is established including alleviation students' burden of learning English and math. Seoul Economy, 2014.12.17.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The effect of after school programs on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2012 Position Paper, 9(20-10)). Seoul, Kore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The study on solutions for the outside-school-factors affecting prior learning* (Research Reports PR 2015-07). Seoul, Kore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Lee, E. A., Kim, S. K., Kim, S. Y., Ahn, G. S., Park, Y. Y., Oh, C. J., Hwang, S. M., & Hong S. Y. (2015). Excessive consulting... Preparing to take an entrance examination from age 5. Maeil Business Newspaper, 2015.9.20.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07859>.
- Lee, K.-H. (2012).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lan to enter special-purposed/independent private schools on their demand for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2(2), 155-178.
- Lee, S. (2002). Inequality of the household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by income class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9), 143-159.
- Lee, S. (2005).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63-76.
- Lee, S. (2006). Household strategy for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burde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2), 115-132.
- Lee, S. S. (2003). The effect of household financial system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Focused on income classific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11), 151-169.
- Ministry of Education (2014). *2014 Policy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Sejong, Korea: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7991>.
- Na, Y. M., & Yoon, J. H. (2011). The effect of the moth-

- er'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the household's characteristics o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6), 1-14.
- Park, H.-J., & Lee, J.-H. (2009).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lan to enter special-purposed high school on their demand for private tutor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10(3), 213-238.
- Park, M. S., Choi, J. Y., & Park, J. H. (2014). *Analysis of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 and implication-Focused on educational expenditur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14-358). Sejong, Korea: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Retrieved from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8&state=view&idx=47906.
- Park, M. H., & Yeo, J. S. (2000).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Korean household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12), 189-206.
- Park, J.-Y. (2006).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according to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6), 61-77.
- Statistics Korea (2014). 2014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Survey. Daejeon, Korea: Statistics Korea.
- Statistics Korea (2012). 2012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Survey. Daejeon, Korea: Statistics Korea.
- Woo, C.-S. (2015). *Direction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policy and new vision*. Sejong,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kdi.re.kr/data/download/attach/10360_sess_1.pdf.

Received: January 12. 2016

Revised: March 28. 2016

Accepted: April 8. 2016